

민주노동당의 분당 과정 연구

정파 · 제도 · 리더십을 중심으로

조현연

성공회대민주주의연구소

〈논문요약〉

이 논문은 민주노동당의 분당의 원인 및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원내로 진입한 민주노동당은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 참패 직후 심상정 비상대책위원회의 혁신안이 부결되면서 분당을 하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의 대선 패배 및 이후의 분당 사태는 ‘응답-책임-신뢰’라는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결과이자, 새로운 진보정치의 전형을 창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accountability)의 원리의 현실화와 대중적 신뢰의 구축에 실패한 ‘20세기형 진보정치’의 파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논문은 우선 권영길 대표체제-김혜경 대표체제-문성현 대표체제 하의 정파갈등 구조와 정치적 파행에 대해 관련 핵심 사건들을 중심으로 탐구한다. 다음으로 분당이라는 파국적 상황이 도래하는 것을 제도와 리더십이라는 장치를 통해 왜 사전에 예방할 수 없었는지를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민주노동당의 분당은 내부 성찰과 혁신에 실패한 결과이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 내부의 정파-패권구조, 특히 민주노동당의 지배 정파 및 그 내부 헤게모니 집단인 이른바 ‘중북-패권주의’ 때문이었다고 본다.

■주요어: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분당, 정파 및 정파갈등, 정파패권구조, 자주
파와 중북파, 헤게모니제도, 리더십, 민주적 책임성, 응답

1. 들어가는 말

2007년 12월 19일 17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2002년 대선과는 달리 국회 의석도 갖고 있었고 또 사표 심리도 작동하지 않은 호조건 속에서 치러졌다. 그럼에도 그 선거는 민주노동당의 존재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선거였다. 비전도 전략도 메시지도 그 어느 것 하나 없었고, 따라서 감동과 열정도 없었다. 민주노동당 부설 기관인 진보정치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 지지자의 76%가 투표했고, 이 가운데 23.5%만이 권영길 후보를 찍었다. 그런 점에서 3.0%에 712,121표라는 득표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것은 불과 몇 년 전의 17대 총선과 비교해볼 때 격세지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였다.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그토록 소망하던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며 당당하게 국회로 진출했다. 가난한 다수의 보통사람들은 자신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희망을 설계해낼 새로운 대안정당이 출현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졌다. 미래의 유력정당으로 평가받으며,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모순에 뿌리를 둔, 전후 세대를 중심으로 한 제2세대 진보정당이자 기층대중조직의 조직적 역량에 기초한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 등 진보학계의 찬사도 쏟아졌다.¹⁾

1) 그 외에도 “단순히 진보정당이 아니라 한국전쟁으로 분단이 고착화된 이후 최초의 정당다운 정당의 출현”, “근대적인 사회적 균열에 기초한 정당이자 역사적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이처럼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은 새로운 전략적 상황과 정치적 기회 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보수가 독점하고 있는 기성 정치의 낡은 시스템과 퇴행의 정치 행태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것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념적·정책적 스펙트럼의 확장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의회 내로 진입되는 사회적 이해관계의 폭, 의회정치의 의제와 이슈 등에 근본적인 충격을 가하면서 기존 원내 진입정당들의 정치적 포지션과 정당 간 정치적 타협과 협상의 방식 등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서복경 2004). 바로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17대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타기 시작했으며, 한때 지지율은 20%를 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갈등의 증폭과 해체는 역설적으로 2004년의 성공에서 비롯되었다. 바로 이때부터 민주노동당의 쇠퇴와 위기가 시작되었으며, 특히 17대 대선을 전후하여 그 흐름은 가속화되고 전면화되었다. 결국 민주노동당은 대선 참패 및 심상정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혁신안의 거부를 결정적인 계기로 해서 분당을 하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의 대선 패배 및 이후의 분당 사태는 ‘응답-책임-신뢰’라는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결과이자, 새로운 진보정치의 전형을 창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accountability)의 원리의 현실화와 대중적 신뢰의 구축에 실패한 ‘20세기형 진보정치’의 과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논문은 민주노동당의 분당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탐구를 기본 목표로 한다. 민주노동당은 왜, 그리고 어떻게 분당하게 되었나?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나? 이 논문은 민주노동당의 분당은 내부 성찰과 혁신에 실패

정당”, “진성 당원 중심의 당내 민주화를 진행해 온 민주적 대중정당”, “기성 정치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기대-희망-신뢰와 참여 사이클’의 선순환 구조로 바꿔낼 중요한 정치적 전기의 마련” 등의 찬사가 있었다(조현연 2004a 참조).

한 결과이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 내부의 정파-패권구조, 특히 민주노동당의 지배 정파 및 그 내부 헤게모니 집단의 ‘중복-패권주의’ 때문이었다고 본다. 이러한 판단 아래 우선 권영길 대표체제-김혜경 대표체제-문성현 대표체제하의 정파 갈등구조와 정치적 파행에 대해 핵심 사건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음으로 분당이라는 파국적 상황이 도래하는 것을 제도와 리더십이라는 장치를 통해 왜 사전에 예방할 수 없었는지를 살펴본다.

2.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서는 정파-패권구조와 ‘중복-패권주의’

1) 정파연합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의 넓은 정파적 갈등과 ‘드러나지 않는 권력’으로서 지배 정파에 의한 일방적 패권주의라는 문제영역이야말로 당을 수직적으로 분획시키고 파행과 파국으로 이끈 주범이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민주노동당은 2000년 1월 창당 당시 운동권 정파의 연합정당으로 출발하였으며, 20세기형 정파인 범NL과 범PD의 민주노동당 관으로 민족해방계열/자주파와 범좌파계열/평등파라는 양대 정파가 구축되었다. 전자는 전국연합이 대표했고, 후자는 그동안 범NL계열의 비판적 지지 흐름에 맞서 노동자와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추진해 온 다양한 흐름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당의 산파이자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의 국민파-중앙파-현장파 간의 갈등 구도도 민주노동당 내부에 투영되어 있었다.

이러한 정파갈등 구도 속에서 민주노동당이 표방한 ‘평등과 자주’라는 이념적 지표는 결국 생태와 평화 등 새로운 영역으로 지평을 넓히지 못했고, 그조차도 80년대 운동권식의 넓은 관념을 극복하지 못했다. 한 핵

심 리더의 지적처럼, 민주노총의 조직적 지지와 정파연합은 민주노동당의 출범을 가능하게 한 필요조건이었지만, 민주노총의 조직적 지지는 대기업 노조에 대한 일방적 의존으로, 정파연합은 낮은 정파들에 의한 패권주의적 쟁투의 일상화로 나타나면서 당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다(노회찬 2008).

모든 정당은 단결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의해 내부 갈등을 제어할 수 있는 서로 상충하는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샤츠슈나이더 2008, 121). 특히 특정 이념과 노선의 집합체로서 정파의 존재는 어떤 정당이든 있어왔으며, 많은 정당들의 경우 초기 정파연합으로 시작하였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정파연합체제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정파연합당은 자연스런 정치현상이기도 하다. 또 일체의 정파가 허용되지 않는, 단일 정파의 독점적 지배 상태와 비교할 때 그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정치가 갖는 역동성의 기원이 갈등에 있고, 따라서 갈등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기관차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정파 간 긴장과 갈등은 민주주의의 장치가 역동적이면 오히려 당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또한 보수가 과거의 시간과 경험에 확실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면, '있어야 할 유토피아'로서 새로운 미래를 '지금/여기서' 구상해내고 실천해야 하는 진보에게 미래란 불확정적이며, 그것이 불확정적이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진보의 스펙트럼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조현연 2006, 153). 이런 점에서 진보정당의 정파는 그 존재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파연합당은 불온한 이미지를 함께 갖고 있기도 하다. 당의 권력 행사가 당원들의 집합적 의사나 건강한 문제의식에 기초하기보다는 지배 정파의 독단이나 정파 간의 이해타산에 따른 담합, 또는 정파 간의 소모적인 대립관계 속에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을 정파연합당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후자의 부정적 이미지와 우려를 담은 평가에 다름 아니었다. 이런 현상의 근원은 민주노동당의 정파질서라는 것이 구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이었다. 즉 당은 21세기에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당 내부의 정파구조와 질서는 오히려 20세기적 낡은 사고와 전망에 갇힌 채 형성되었던 것이다. 결국 현재의 과제와 미래의 전망을 둘러싼 경쟁구도와 무관하게 형성된 낡은 정파질서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과거의 인연만을 재생산하는 이른바 '운동권 동창회'를 넘어설 수는 없었다.²⁾

민주노동당 창당 초기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민주노동당이라는 같은 정당의 틀 속에서 활동하다 보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스스로를 변화시켜 결국은 당의 이름 아래 하나의 큰 정치적 단일대오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실에서는 각 정파들 간의 각축과 긴장과 갈등만이 심화됨으로써 오히려 당 활동의 질곡으로 작용해왔다(김석준 2008). 문제의 핵심은 한 정파가 다수의 지배 정파가 되기 위해 진보의 상식을 저버리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또 다수의 힘을 앞세워 민주적 논쟁 과정에 이르는 길을 원천 봉쇄하면서 주요 결정을 당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정파의 이해에 복속시키는 파행 사태를 연출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누적되면, 당내 소수파나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의지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은 지배 정파에 대한 깊은 불신과 상처와 좌절감 속에서 열정적인 당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민주노동당 내에서 특히 2004년 총선 이후 지속

2)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149호(2003.9.29)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대체로 정파는 정당에 비해 그 규모가 작은 반면 인적 친밀도가 높다. 타 정파와의 일상적 경쟁관계 때문에 결속력 또한 높다. 이 같은 정파의 강점은 자기정화기능의 상실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낳기 쉽다. 특히 낡은 전략, 낡은 학교관계, 낡은 서클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파의 경우 조직 보존 혹은 조직 확장의 논리 앞에 자기정화 기능은 무력화되기 쉽다. 당의 공적 이익보다 정파의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종파주의의 근원도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전략거점을 당 바깥에 둘 경우 이런 종파주의의 폐해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정파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것, 즉 드러나지 않은 권력으로 작동을 함으로써 결정은 하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노동당 내 정파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민주주의와 다수결 원리가 형식적으로 관철되는 속에서 내부 정치의 게임 규칙은 지속적으로 훼손되었다. 사실 다수결 원리라는 것은 표결을 통한 다수의 지배와 소수 의견의 존중이라는 양대 축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지배 정파로서 자주파는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소수 의견에 대한 무시와 거부를 계속했다. 남는 것은 다수의 횡포였을 따름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죽이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세계관과 정치관을 갖고 있는, 이질적이고 융합되기 어려운 세력들이 굳이 한 울타리 안에서 불안정한 동거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분당 사태는 지배 정파의 비민주적이고 패권적 행태가 당내의 민주적 토론과 의사결정구조를 훼손함으로써 진보신당을 만든 세력을 결과적으로 축출해버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 논자의 지적처럼, “누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든 책임을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항변과 질문이 도전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이었다(김민용 2008).

한편 2004년 총선 이후 몇몇의 특정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민주노동당의 전체 역사는 ‘악화가 양화를 몰아 내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역사적 궤적은 대중적 신뢰의 약화 및 지지의 하락 추세와 함께 진행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17대 총선 이후 각 선거에서 유권자의 경고 신호로 나타났고, 결국 17대 대선의 결과는 그것의 집약적 표현이었다. 즉 ‘긴 과정의 마지막 세리모니’인 17대 대선의 득표 결과는 기본적으로 17대 총선 이후 긴 과정의 잘못에 대한 ‘인민의 평결’이라는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정파간 갈등구조 및 지배 정파의 패권주의와 연관된 핵심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2) 권영길 대표체제: 정파 갈등의 억제

민주노동당은 2000년 1월 30일 “민중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현은 시대적 요청”이라는 선언과 함께 권영길 대표를 선출하고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초기 민주노동당은 평등파의 상대적 우위와 다양한 정파 간의 협력과 긴장의 공존 속에서 활동을 전개한 정파연합당으로 출범하였다. 물론 내부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당명 및 강령 제정 과정과 2000년 총선의 울산북구 파동, 재창당의 추진과정을 둘러싼 불협화음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났다.

1999년 8월 29일 진보정당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당원의 손으로 당명을 뽑는” 한편 축제였던 당명 제정을 둘러싼 양대 정파의 갈등구도가 나타났다. 4차에 걸친 표 대결 끝에 결국 40표 차이—민주노동당 651표, 통일민주진보당 611표—로 당명은 민주노동당으로 결정되었다. 강령 제정 과정에서도 북한체제의 성격 규정과 통일의 방향, 강령의 제목 등을 둘러싼 자주파 계열의 문제 제기로 인해 논란 끝에 일정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이 강령 논쟁은 이후 통일방침 작성 등을 둘러싼 정책위원회 평화군축운동본부와 자주통일위원회의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그리고 2000년 총선 실패 이후 재창당의 추진과정에서 민족민주전선 민족민주정당을 지향하는 자주파의 운동노선과 당 활동 기본 방침—뒤에서 언급할 이른바 ‘9월테제’—이 부분적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³⁾

한편 2000년 16대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의 울산북구 후보 선출 파동 및 선거 결과는 당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민주노동당 정파 갈등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⁴⁾ 울산 북구 후보 경선

3) 당시 재창당 추진과정에서 사회당과 통합 논의는 조선노동당에 대한 태도문제를 중심으로 지지부진하다가 중단된 반면, 전국연합 계열의 집단 입당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4) 이 사건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현대자동차노조 예비선거에서 패배하자 울산연합이 울산당 지부 총회에 독자후보를 출마시켜 당내 세력우위를 이용해 당선시킨 사건을 말한다.

및 인준과정에 대해 당시 민주노동당 내부에서는 두 가지 입장이 대립되었다. ‘민주적 절차로 위장한 사기극’, ‘선거 참패 위기 자초한 종파주의’ 등 비판적인 입장이 그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민주적 절차에의 승복’, ‘적전 분열을 중단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이라는 이름 아래 결정을 따르라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내부의 갈등과 대립은 중앙위원회에서, 최용규 후보 인준안에 대해 투표 결과 재석 65명, 찬성 40명, 반대 24명, 무효 1명으로 통과되고 선거 후에 전반적인 평가를 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봉합되었다(조현연 2000). 총선 이후 열린 임시당대회에서는 울산 북구의 후보 선출에 대해 “당의 16대 총선 목표와 당내민주주의, 어느 쪽에도 부합하지 않는 심각한 종파적 행위였으며 불공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이어 열린 당기위원회가 관련 당사자들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단락되었다.

한편 2001년 지구당 편제가 시작되면서부터 일부 정파가 지구당 장악을 위해 주소지, 직장 소재지 등과 무관하게 당원들을 대거 지구당에 끌고 들어오면서 정파 갈등이 부분적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용산 지구당 사태와 의정부 갑 지구당 창당 사건 등은 ‘9월테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자주파에 의한 지구당 장악 과정에서 발생한 파행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다.⁵⁾

어쨌든 자주파가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이 있었지만, 민주노동당 1기/2기 지도부인 권영길 대표체제는 기본적으로 정파 갈등의 억제를 특징으로 했으며, 그런 점에서 ‘정파갈등 억제적 리더십’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

5) 2002년 2월의 용산지구당 사태는 자주파 계열인 인천연합에서 대대적인 당적 이동을 통해 용산 지구당의 당권을 장악한 사건을 말한다. 의정부 갑 지구당 창당 사건은 의정부 지구당에서 대의원대회에서 후보 인정이 무산되자 경기도지부 상근자가 허위공문을 작성하는 등 창준위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후보로 출마하려 한 사건을 말한다. 2000년 4·13총선 당시 34개였던 지역조직은 2002년 3월 현재, 13개 광역시도지부 및 지부준비위와 85개 지구당 및 지구당(준), 4백여 개의 지역 및 직장분회 건설로 확대되었으며 당원의 수는 2만 명을 상회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낡은 ‘정파적 이해관계’가 ‘당적 질서’보다 우위에 있었음을 두 사건은 잘 보여주고 있다.

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창당 초기라는 상황적 특성, 97년 대선 이후 일종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할 수 있었던 힘든 시기에 국민승리21을 이끈 권영길 대표 및 지도부의 '권위'에 대한 존중, 그리고 정파간 공존의 규칙에 대한 암묵적 동의 등이 있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민생 관련 현안, 즉 4대 민생법안(고금리 제한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보호법, 집합건물관리법 개정안)과 부유세 도입 서명운동, 학교급식제도 개선운동의 본격화 등에 힘을 쏟을 수 있었던 것이다.

3) 김혜경 대표체제: 정파 갈등의 표출과 임시 통합

2004년 17대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은 정파의 안배 속에서 김혜경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3기 지도부를 출범시켰다. 제3기 지도부를 맞으면서 민주노동당은 권영길과 노회찬 등으로 상징되던 당의 얼굴들이 원내로 진출하고, 신임지도부로 인적 교체를 이루었다. 그것은 단순한 인적 교체가 아니라 지역과 부문에 흩어져있던 지도력이 당의 틀에서 새롭게 집단화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3기 지도부의 출범은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의 원내진출과 함께 시작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고 역할 또한 중대할 수밖에 없었다. 원내 진출이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가는 당을 진보의 이념을 지키면서 제3당의 위상에 걸맞게 만드는 과제가 지도부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갈등융합형 리더십을 특징으로 하는 김혜경 대표체제는 자신의 역할과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당내의 정파 갈등 문제에 대해 임시 통합하는 수준에 그친 채 중도하차하고 말았다.

3기 지도부는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3인 일반 최고위원, 4인 여성 최고위원, 노동 및 농민 부문 최고위원 각 1인 등 13인 최고위원의 집단지도체제였다. 당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위원회의의 경우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자주파가 장악하면서 당내 지배 정파로 급부상

했다.⁶⁾

최고위원 선거는 자주파가 조직적으로 내세운 후보로 불거진 ‘세팅 논란’이나 ‘조직적 담합 투표에 따른 몰표 현상’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불거진 정파 간 대립을 인식하면서 ‘빈민운동의 대모’인 김혜경 대표는 첫 일성으로 당의 통합과 단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민주노동당은 통합과 단결의 길이 아니라, 정치적 파행의 연속 속에서 긴장과 갈등을 심화시켰다. 당의 지지 기반인 노동자와 서민들의 감동과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것은 그 당연한 귀결이었다. 결국 2005년 10·26 재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또 민주노동당의 자성과 혁신을 위해 김혜경 대표가 전격 사퇴했으며, 불협화음 끝에 최고위원단도 전원 당직 사퇴를 결정했다.⁷⁾

사퇴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는 “진보정당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한 의견들이 창조적 긴장과 경쟁 속에서 당 발전에 기여해야 함에도 오히려 당의 혼란과 정치적 후퇴를 초래한 경우들이 종종 발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당의 심각한 정파갈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6) 사실 이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민주노총이 전국연합에 대한 견제 역할을 했던 과거의 상황과 달리, 민주노총의 국민파와 중앙파는 자신들의 소모적인 갈등관계를 당으로 그대로 옮겨왔고, 그것은 국민파로 하여금 전국연합과 전략적 제휴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7) 2005년 10월 31일 김혜경 대표가 먼저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평등파인 주대환 정책위의장과 김종철 최고위원 등이 동반사퇴 입장을 밝혔으나, 김창현 사무총장 등 자주파 지도부가 “1월의 개편을 앞두고 지금 사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사퇴를 거부하면서 2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4) 문성현 대표체제: 정파 갈등의 증폭과 폭발

제3기 지도부가 전격 총사퇴한 이후 3달여만에 민주노동당은 4기 지도부로 문성현 대표체제를 출범시켰다. 2006년 2월 결선투표까지 간 끝에 문성현 후보가 민주노동당 자주파-민주노동 국민과의 연대와 지원 속에서 평등파의 지원을 받은 조승수 후보를 간발의 차로 누르고 당 대표로 선출된 것이다. 당 대표 선거에서 조승수 후보의 낙선은 당내 권력경쟁에 있어 후보의 명망성이나 정치적 능력과 자질의 문제가 당락을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즉 다수 정파의 지원만이 당선을 가능케 하는 힘이었고, 이것은 혁신을 위한 지배연합의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한편 총 13인으로 구성되는 4기 지도부는 대표-사무총장-정책위의장 등 당 3역은 물론 최고위원 대부분이 자주파로 구성됨으로써 지도부의 정파 편향성이 더욱 굳어졌다. 2004년 3기 때보다 2006년 4기 지도부의 선출과정은 평등파 계열에게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었다. 4기 지도부의 선출 과정이 2006년 당시 민주노동당의 침체 및 정당운동 쇠퇴에 대한 3기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선거이자 동시에 새로운 정당운동의 전망을 묻는 선거였음에도, 자주파 중심의 지도부가 또다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당운동에 대한 강한 회의가 평등파 구성원들과 당원들 사이에 자리잡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으며, 갈등의 증폭과 폭발은 어떤 면에서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한편 진통 끝에 새 지도부가 구축됐지만 민주노동당은 여론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무쟁점 선거, 고질적이고 퇴행적인 정파 갈등과 조직간 흑색 선전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⁸⁾

8) 당내 선거가 벌어지면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받고 당 지지도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이와는 달리 민주노동당이 선거기간에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담보하는 현상을 보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당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당의 지지율은 8.8%를 기록했으며, 그 직후 다른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6% 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특히 2차 선거 막바지에는 “법적 당원 자격이 없는 조승수 후보가 당선되면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무소속이 된다”, “국고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등의 악성 마타도어가 인터넷 게시판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등 선거가 극히 혼탁한 양상으로 치닫기도 했다.

그 후폭풍으로 문성현 대표체제의 파행은 출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 대표 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 부정이 폭로되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으로, 이른바 ‘진보정당’이라는 곳에서 보수정당의 전유물로만 여겼던 부정선거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하나의 충격이었다.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는 허위사실의 조직적 유포가 사실이었음을 밝혀냈지만, 임시당대회 안건 상정이 ‘현장발의’ 형태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중앙위원회에서는 재적 중앙위원 190명 중 찬성 40표로 부결되는 등 파행의 연속이었다. 진상조사위 구성을 승인했던 중앙위가 그 결과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중앙위에서 부결되자 검찰 고발을 위한 당원들의 연명작업이 시작되고 임시당대회 현장 발의로 한 번 더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사안이 맨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결과는 정족수 미달로 표결도 하지 못한 채 일단락되고 말았다. 이 모든 과정은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 등 당의 의결기구까지 장악한 지배 정파 및 자주파-국민파의 다수파 블록이 정파적 이해를 당의 이해보다 앞세우는 파행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었다.

취임 초기 문성현 대표 역시 당내 정파 갈등과 대립을 염두에 두고 ‘통합’을 강조했다. 그러나 어설픈 통합론으로 난맥상을 연출했던 3기 지도부와는 달리, 문성현 체제는 내용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문제, 통일 문제 등 자주파의 전통적 의제에 집중해 나갔다. 2006년 북한 핵 실험과 (뒤에서 언급할) 이른바 ‘일심회 사건’은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명확히 드러내주었다. 사실 북한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태도 문제는, 노동 ‘운동’ 조직으로서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민주노동층에 대해 할 말을 제대로 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민주노동당의 ‘진보’를 시험

하는 관건 중의 관건이었다. 즉 그것은 민주노동당 내부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른바 '2개의 성역'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자, 자주파-국민파의 다수와 블록에 기초한 지배 정파 구도를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했다.

바로 이때부터 평등과 계열에 속하는 정파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정파 연합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데 대한 회의가 집중적으로, 전면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당 내부에서 노선투쟁이 전개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민족제일주의'와 식민지 규정 등 지배정파로서 자주파의 노선과 세계관이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라는 데 있었다. 나아가 자주파가 민주노총 국민파와의 연합과 특유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당권을 지속적으로 장악함으로써, 정파의 동거구조가 미래의 대안 제시와는 인연이 먼 것이라는 점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분명해졌다(장석준 2008). 즉 대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어떤 이슈가 주도권을 갖느냐라는 중차대한 문제와 관련해 문성현 체제는 사회 구성원들의 뜻과는 상반된 길을 걸음으로써 민주노동당을 무력한 존재로 전락시켰던 것이다.

북한 핵실험 사태가 터지자, 민주노동당은 2006년 10월 15일 중앙위원회에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민주노동당 특별결의문' 채택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논쟁은 시작부터 격렬하게 진행됐고 당 차원에서 '북핵 보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다. 결의문 채택을 둘러싼 논의는 회의 규정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자유토론식 논쟁을 3시간 가까이 이어갔다. 미국의 북 체제 말살 기도와 압박-북핵의 자위권 인정이라는 자주파의 주장에 대한 논쟁이 핵심이었으며 그것은 북한 정권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했다. 결국 회의는 마지막 원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표결을 앞두고 정족수 미달로 자동 산회되었다.

머릿수의 우위를 앞세운 지배 정파의 패권주의적 행태 속에서 정파 간 갈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일상시기 당의 지지율과 선거 득표율은 점점 더 떨어져만 갔다. 사실 민주노동당 지지자들과 잠재적 지지층은 문성현

대표체제하에서 진행된 선거를 통해 실망과 항의의 목소리를 통해 계속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적색 경고등이 커졌음에도 그에 대한 당 지도부와 지배 정파의 반응은 묵묵부답이었다.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예컨대 참패로 끝난 2006년 지방선거의 경우 평가도 책임의 주체도 없었다. 당권파인 자주파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소수파인 평등파는 당이 깨질까봐 결과적으로 이에 공모했다. 지지율은 끝없는 하향곡선을 그렸고 대중은 계속 멀어져만 갔다. 또한 당은 무기력해져만 갔고 내부 소통의 시스템은 붕괴되었으며 위기는 계속 누적되었다. 자주파 계열을 제외하고 지지자들의 눈에 비친 민주노동당과 그 지도부는 편협한 정파 이익을 추구하는 권력기회주의적인 정치집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가온 2007년 대통령선거는 민주노동당에게 어쩌면 누적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동력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대선 준비과정에서부터 내부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다. 마지막 기회로서 2007년 대선이 누적되어온 문제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지 못할 때 갈등의 대폭발과 파국적 상황의 도래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민주노동당의 2007년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인민의 경고에 대한 무시는 변화 없이 진행되었다. 세대교체를 통한 변화와 새로움을 기대한 지지자어나 유권자들의 뜻과는 달리, 결과는 민심과의 동떨어진 후보의 선출이었다. 드러나지 않는 권력으로서 지배 정파가 자신의 특정한 이해관계 관철을 위해 경선 결과를 민심의 뜻과는 달리 왜곡시킨 것이었다. 그것은 결정적인 것으로, 실망에 따른 지지자의 항의 이탈은 확정적인 것이 되었다. 이처럼 경고에 대한 지속적인 무시와 거부에 대해 지지자들은 17대 대선에서 표로써 일종의 복수를 감행한 것이었다. 누군가 갈파한 것처럼, “민주노동당은 경선을 끝으로 대선을 미리 끝내 버렸다. 대선의 결과는 그 의미를 확인해주는 절차에 불과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당내 지배 분파와 후보뿐이었다”(박상훈 2007).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 17대 대선은 명백한 패배였다. 16대 대선 당

시 3.9%였던 득표율은 조건이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았음에도 3.0%로 떨어졌다. 비판적 지지 흐름의 부재와 국회의석의 확보 등 호조건 속에서도 5년 만에 최소 1/4의 지지자를 잃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끝없는 추락으로 대안적인 정치세력의 등장이 중요했던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미래가 없는 낡은 진보세력의 모습일 뿐이었다. 즉 대선 당시 민주노동당은 이미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동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이다. 예컨대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으로 인해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대중의 삶의 질이 계속 악화되었다.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이처럼 불안정한 삶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2007년 대선의 최대 쟁점은 단연 경제와 민생일 수밖에 없었으며, 진보정당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최우선적 쟁점으로 제기했어야 했다. 그러나 자주파가 장악한 당 지도부와 선거운동본부는 그것을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한 편 의 코미디였던 ‘코리아연방공화국 파동’은 그것의 집약적 표현이었다.⁹⁾

결국 2004년 17대 총선 이후 2007년 17대 대선에 이르기까지 민주노동당의 활동은 ①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차별화 실패, ② 노동자 정치의 실패와 그에 따른 전략적 지지기반 상실, ③ 정파 패권으로 인한 당내 민주주의의 왜곡과 당원들의 정치적 활력 저조, ④ 사회운동성을 상실하고 의회 정치로 경도된 정치활동, ⑤ 진보적 가치의 대중화와 다면화 실패 등(진보신당 진보정치 10년 평가위원회 2009, 1)의 길을 걸어왔으며, 그것의 결과가 바로 2007년 17대 대선의 참패로 나타난 것이었다.

9) 17대 대선에서 자주파가 들이밀었던 이른바 ‘코리아연방공화국’의 각 분야별 과제는 정책연구원들의 절대적인 반대에 부딪혀 결국 삭제되고 국가비전이란 형태로 공약집 한구석에 비집고 들어가는 선에서 끝났다.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가 싶더니, 사무총장이 당의 공식 결정을 어기고 또다시 코리아연방공화국을 대선 슬로건으로 담은 포스터를 찍도록 한 우스꽝스러운 사건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5) 심상정 비대위체제: 혁신의 실패

2004년 총선 이후 특히 2007년 대선은 보수 독점, 보수 우위의 정치 구도를 보수-자유-진보 또는 수구-보수-진보의 3세력 정립구도로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선거 참패로 이것은 무산 되었으며, 이는 이른바 '87년 체제'의 청산에 실패한 것파도 맞물려 있는 것이었다.

2007년 대선 패배를 직접적인 계기로 해서 그동안 누적되었던 갈등이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민주노동당의 분당 논의는 본격화되었다. 대선 참패를 전후해서 드러난 민주노동당의 심각한 위기는 어쩌면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과 함께 새로운 정치적 기회의 공간을 창출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선 참패 이후에도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채 파행의 연속으로 점철되었다. 보통의 정당이라면, 선거가 참패로 끝날 경우 정파의 이해와 상관없이 지도부 총사태와 비상사태 돌입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자기들만의 단결을 과시한 채 위기에 대한 인식도, 책임정치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냥 시간만 죽이고 있었다.

17대 대선 이후 당의 진로와 관련한 내부 갈등은 변화와 혁신을 거부한 채 '지금 이대로'를 고수한 자주파, 민주노동당의 사망을 선고한 분당파(선도 탈당파), 그리고 민주노동당이라는 틀 안에서 변화시키려 한 쇄신파(혁신파) 등 세 흐름으로 확연하게 갈라섰다. 이 세 흐름 가운데 대선 참패를 책임져야 할 세력은 다름 아닌 자주파였다. 2004년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은 자주파가 당에 씌운 질곡, 즉 자본주의 모순 심화로 인한 민생 파탄의 책임을 분당과 식민지성 탓으로 돌리는 허구적인 상황 인식하에 현실과는 동떨어진 과제에 당의 역량을 집중시켜왔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의제 선정에 오류를 범한 것이었으며 대선 결과는 그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자주파는 대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느커녕, 오히려 18대 총선 비례대표 선출을 둘러싼 극심한 당내투쟁을 의도적

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면을 전환시키려 했다.

사실 당권파이자 지배 정파로서 자주파는 민주노동당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협력적이고 개방적으로 당을 운영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타협과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했는데, 자주파는 그것을 거부한 채 자신들만의 노선과 방침을 민주노동당에 강요하려 했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앞서 말한 코리아연방공화국을 대선의 캐치프레이즈로 채택하려 했던 시대착오적인 시도였다. 그리고 대선 직전인 2007년 11월 17일 중앙위원회에서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방식과 시기를 자신들의 뜻대로 관철시킨 것은—비록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 할지라도—평등파들을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지 않고 오직 다수파로서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려는 자주파의 무책임한 행동 속에서 갈등의 폭과 불신의 골은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져만 갔고 이에 따라 탈당 사태가 곳곳에서 속출하기 시작했다. 탈당의 표면적 이유는 자주파를 장악한 종북-패권주의 흐름에 따른 민주노동당의 진보정당으로부터의 이탈 및 진보적 가치의 훼손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민주노동당의 오류와 노선을 도저히 바꿀 수 없다는 현실로부터 오는 자괴감도 크게 작용했다.

이처럼 대선 참패의 수습 방안을 놓고 당 안팎에서 백가쟁명식의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4기 지도부가 전원사퇴를 결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패권주의와 종북주의 등 민주노동당의 실천을 성역과 편견 없는 평가를 통해 정립해 나갈 것”을 선언하면서 심상정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심상정 비대위는 “운동권 정당, 민주노동당, 친북당 등 그동안 제기된 국민의 질책과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운동권정당을 넘어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의 낡은 요소를 과감하게 혁신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활동을 시작하였다.¹⁰⁾ 그리고 활동의 결과로 민주노동당 혁신안을 마련하여 임시당대회에 제출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분열사태 해결의 중대 분수령이었던 2008년 2월 3일 민주노동당의 대의원들은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키고 대신 혁신을 거부한 수정안을 채택하였다. 핵심 쟁점이었던 일심회 사건 관련자 제명에 관한 혁신안의 관련 내용을 완전히 삭제하는 자주파 진영의 수정동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적 대의원 862명 가운데 553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던 것이다. 사실상 그것은 심상정 비대위에 대한 압도적인 불신임으로, 일부 평등파 계열의 지지 속에 다수 정파인 자주파가 패권주의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독단적 패권성을 한껏 발휘했던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심상정 비대위가 출범할 때부터 예고된 것이기도 했다. 심상정 비대위의 성패가 애초부터 절대 다수파인 자주파의 손에 온전히 달려 있는 상황에서, 자주파의 헤게모니를 건드린 혁신안을 그들이 수용하기 만무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동안 당 운영을 주도해 왔을 뿐만 아니라, 17대 대선 참패의 가장 큰 책임 주체임에도 당대회에서 자주파가 보여준 행동은 여전히 반성과 성찰 없는 다수의 횡포일 따름이었다. 심상정 비대위가 얻은 유일한 소득이 있다면, 자주파의 실체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뿐이었다.

사실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안은 일정하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대안이었다. 혁신안의 안건에는 편향적 친북행위 관련자 제명, 패권주의 평가, 정파등록제의 도입 및 1인 1표의 제도화, 정당법과 투명회계

10) 심상정 비대위의 구성과 역할의 내용은 “① 비대위의 임무는 17대 대선평가사업, 당 혁신사업, 총선 대책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대위 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비대위는 총선 후 차기 지도부 선출시까지 당현과 당규에서 정한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수행한다. 단, 그 이상의 권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서 위임여부를 결정한다. ④ 당 활동의 중요한 질곡으로 작용해온 정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8대 총선에 한하여 비례대표선거에서 전략공천을 대폭 확대하며, 이에 대한 방침마련을 비대위에 위임한다. 비대위는 전략공천에 관한 방침 및 방안을 당대회에 승인받아 집행한다. 비대위는 당대회의 승인에 따라 전략명부 후보를 추천하여 당원 총투표를 거쳐 확정한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의 원칙에 근거한 당 재정운영의 현대화 방안, 제2창당과 재창당의 방안 등 그동안 지적되어 온 민주노동당의 수많은 문제에 대한 평가와 대안이 총망라되었다. 만약 원안대로 정파명부제를 시행하고 그간의 패권주의에 대해 엄단하고 편향된 친북주의에 대해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었다면,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시대착오적인 사태 인식이 종북파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고 자주파 계열의 헤게모니 그룹인 종북파가 자주파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것이 당대회장에서 일사불란한 집단행동으로 표출된 상황에서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한 일이었다.

“민주노동당 위기의 본질은 결코 종북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미국의 신지배전략과 이에 조응한 반복분열주의세력이 조작한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민주노동당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다. 우리는 승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 민족과 스스로의 힘을 믿고 민주노동당의 깃발 아래 일치단결하여 진보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특별선언문(2008. 2. 4)은,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안을 부결시킨 자주파와 그 헤게모니 그룹인 종북파의 상황 인식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의 모든 모순을 미국의 제국주의 책략으로 보면서 ‘반미’야말로 그들의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만천하에 다시 한번 밝힌 셈이다.

한편 2월 3일 임시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노동자전국회의〉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출신인 선도탈당파의 조승수 출당과 비대위 혁신안 반대, 새로운 진보정당운동 해체 촉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지침을 전국에 내려 보내는 등 표 단속에 나섰다.¹¹⁾

11) “자주·민주·통일과 노동자 해방세상의 염원을 안고” 2001년 4월 25일 출범한 전국회의는 민주노동총 활동가들 가운데 이른바 국민파, 자주파에 속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여기에는 인

전국회의 지침은 비대위 혁신안이 “이른바 ‘중복’ 과 일방적 책임전가 식의 내용이며, 사실상 ‘반복정당화’, ‘자주통일운동 전면 부정’, ‘자주대 오 불인정’ 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평가하면서 수용 불가의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리고 지침의 실현을 위해 전국회의는 “노동자 부문할당 대의원 명부 점검, 100% 참가 조직, 매일 점검체계, 지역별 토론회” 등을 독려하기도 했다(민주노동자전국회의 2008).

이처럼 민주노동당이 다수의 이름으로 끝내 ‘마지막 비상구’ 를 스스로 틀어막은 사태가 특정 세력의 일사불란한 행동 통일과 조직적인 반대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결국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안에 대한 거부는 필연적인 수순이었으며, 분당으로 이어지는 것 역시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후 민주노동당의 평등파를 중심으로 한 집단 탈당의 흐름과 진보신당 창당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2008년 2월 9일 민주노동당 자주파의 핵심 그룹인 <자주와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전국모임>이 해산을 결정했지만 그것은 책임 회피 및 책임 전가용 결정이자 ‘악어의 눈물’ 일 따름이었다.¹²⁾

천, 경기동부, 울산연합 등 자주파의 주요 지역 연합조직의 핵심 노조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회의의 지침은 사실상 자주파 계열 전체의 당대회 지침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12) 이들은 “다수파이자 당권파로서 당의 대선패배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당 분열상황을 막지 못한 통렬한 반성의 일환으로 전국모임 해산을 결의하였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위기는 수습되고 혁신되기는커녕 분당을 위한 명분 쌓기로 중복주의와 패권주의 덧칠이 자행되었다. …당의 분열을 추구하던 선도탈당파들이 내세운 근거 없는 중복주의 척결 주장을 심상정 비대위가 여과 없이 받아들였다” (전국모임 2008)고 선도 탈당파와 심상정 비대위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3. 종북-패권주의의 근원: '9월 테제'

2007년 17대 대선 후 지배정파인 자주파, 특히 그 핵을 차지하고 있던 종북파의 태도는 마치 멈춰버린 고장난 시계와 같았다. 이들은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이해할 실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데 안간힘을 썼다. 다자 대결구도 등 객관적으로 불리한 조건 때문에 대선 결과는 어쩔 수 없었다거나, 모두가 책임이라거나, 힘을 합쳐도 3%이기 때문에 합심 단결해야 한다거나, 또는 있지도 않는 종북이 아니라 분열을 피하는 종파가 문제의 근원이라거나, 분당하고 싶으면 조용히 나가라거나 하는 등의 주장이 그것이었다. 명확하게 있는 것을 없다고 부정하면 할수록 유령과의 싸움만 가속화될 뿐 쌍방향 소통은 불가능했다.

물론 다수파인 자주파 전체가 종북주의 노선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시대착오적인 '맹목적 민족주의-통일지상주의-반미자주화' 일색으로 무장한 종북파가 민주노동당을 숙주로 해서 자신들의 숙원사업을 파행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비종북 자주파의 내부로부터의 자유선언이 없었다는 데 있었다.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파행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었다(조현연 2008).

자주파, 특히 종북파에게 민주노동당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통일전선적 성격을 지닌 정당으로, 그것은 전략적 지위의 정당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일전선적 성격의 전술 정당이기에 민주노동당은 단지 장악해야 할 대상에 불과했고 일단 당을 장악하면 종북파 노선의 패권주의적 관철이 우선시되었다. 즉 종북주의와 패권주의는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바로 종북주의 때문에 패권주의가 나타난 것으로, 양자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들의 기본 노선과 숙원사업은 2001년에 마련된 59쪽 분량의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이른바 '9월 테제' 라는 문건에 잘 드러나 있다. 그

핵심 골자는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우리의 거룩한 대강령” 아래 “조국 통일의 대사변기를 맞이하여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기필코 이루고야 마겠다는 각오로 10년의 전망을 바로 세워내고, 그를 위해 승리의 조직적 담보인 강고한 민족민주전선과 (자주민주통일을 강령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민족민주전선에 복무하는) 민족민주정당 건설을 위한 3년 계획의 수립”이다.¹³⁾

자주·민주·통일을 대강령으로, 그리고 1930년대식 통일전선전술의 사고를 담고 있는 9월 테제의 내용은 ‘민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진보의 길을 찾는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기본정신을 자신의 길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었다. 결국 중북파의 포로가 된 자주파가 지역과 중앙의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세팅선거, 위장전입, 집단주소 이전, 당비대납, 대리투표, 흑색선전 등 온갖 불법과 편법을 감행한 것, 당권파가 된 후 승자독식 속에서 저질러 온 술한 패권주의적 행태들, 다수의 횡포 속에서 이루어진 독선과 독단의 사례들, 재정문제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 북핵문제에 대한 상식 이하의 태도나 이른바 ‘일심회 사건’, 코리아연방공화국 파동, 대선 공약으로 “미군철수 후 북핵 폐기” 항목 슬그머니 끼워넣기 등은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9월 테제의 내용을 억지로 현실화시키려는 데서 필연적으로 빚어진 것이었다.¹⁴⁾

13) 이와 함께 9월테제는 반미자주화 투쟁을 “이남의 변혁운동의 전략적 중심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투쟁은 “이남 민중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 민족적 과제이며 반미자주화를 실현하는 힘 역시 전체 민족자주역량으로부터 나온다”, “민주노조운동이 반미자주화를 주선으로 하는 운동으로 발전시키자”, “반미자주화투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 민족민주진영이 광범위한 민중의 지지를 받는 정치적 다수파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2001).

14) 샤츠슈나이더(2008, 66)는 “어떤 이념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를 실험해 보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것을 통해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어떤 사상이나 이념적 노선이 자신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비판과 대안의 무기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각 시대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하면서, 대중의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폭넓게 또 정확하게 분석하고 동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결국

이처럼 9월 테제의 내용 및 그것의 폭력적 비상식적 관철과정과 함께,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전체주의 체제이며 그 내부에 심각한 인권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미와 민족통 통일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핵심 질곡이 무엇보다도 중북-패권주의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9월 테제의 현실적 가동은 민주노동당의 운영을 특정 세력이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특정한 세력균형 상태를 해체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사실 전국연합으로 대표되는 민족해방 계열은 그동안 독자적인 정당건설 운동에 대해서는 비판적 유보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다가 1997년 대선 국면에서 국민승리21에 대한 조직적 참여 방침을 결정했지만, 김대중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다시 조직적으로 후퇴했다. 국민승리21로부터의 조직적 후퇴는 9월 테제가 진보정당 건설을 민족민주운동의 당면 목표로 설정하는 2001년 9월경까지 지속되었다.¹⁵⁾

9월 테제는 아직까지 민주노동당에 입당하지 않는 전국연합 산하 활동가와 그 조직원들의 입당을 독려했으며, 민족해방 계열의 대대적이고 조직적인 민주노동당 입당 흐름은 2002년 6월 지방선거 및 2004년 총선을 전후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전의 정파 간 세력균형을 해체하면서 다수와 연합으로서 자주파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2004년 9월 당 지도부 선출과정에서는 지도부를 장악하면서 당권파로 등장하였다. 당 지도부를 장악한 자주파는 임명직 주요 당직을 교체하기 시

역사적,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이념이나 노선은 지배의 논리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저항과 대안의 논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점에서, 9월 테제는 시대착오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15) 민족해방 계열의 진보정당운동을 이전 시기와 단절시키는 결정적 계기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이었다. 6·15선언을 매개로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일정한 진전과 정당운동을 통한 사회변혁의 잠재성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내부의 입장 차이가 종합되면서 내부의 갈등은 급격히 정리되었다. 이른바 전국연합의 9월 테제는 이러한 민족해방 계열 내부의 재편이 일정한 단계에 도달했음을 선언한 것이었다(장훈교 2009).

작했다. 그 가운데서도 2005년 당 기관지인 『진보정치』와 『이론과 실천』의 편집진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교체하는 사태로 인해 당 내부에서 평당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힌 사건이 가장 상징적이었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이 정파 간 균형으로부터 자주파 주도의 정당으로 진행될수록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대안정당에서 멀어지는 일련의 악순환을 거듭했다.

한편 9월 테제는 자주파 계열이 주요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지역의 지구당을 장악, 운영해 정치적 효과를 높이려는 ‘의욕적’ 행동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당권 장악을 위해 무리수가 뒤따른 것은 당연했다. 앞서 살펴본 2003년의 용산지구당 사태와 의정부 갑 지구당 창당 사건 외에도, 2004년의 광주 당비대납사건과 아이피 추적 사건과 경기도당 도지부장 선거 팩스 사건, 2007년의 광주시당 위원장선거 공보물 고의 지연 사건 등은 그나마 약간 알려진 사례에 불과했다.

민주노동당이 친북정당이라는 오명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북한의 핵보유와 6자회담 탈퇴에 대한 당의 침묵, 당의 대표적 브랜드 가운데 하나인 부유세 문제의 실종 및 담당 윤종훈 정책연구원의 사퇴를 촉발한 최고위원회의의 부유세 폄하 발언, 조승수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선동 등 당대표 선거 부정, 일심회 사건과 북한 핵실험에 대한 뒤늦은 ‘유감’ 표명 사태, 전선체운동과 정당운동의 관계에 대한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2007년 한국진보연대 가입 등도 바로 9월 테제를 작동시키는 데서 발생한 사건들의 목록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일심회 사건과 그것을 둘러싼 당 안팎의 파장은 가히 압권이었다. 일심회 사건이란 2006년 검찰이 민주노동당 최기영(전 사무부총장)과 이정훈(전 중앙위원) 등 5명에게 국가기밀 탐지/누설/전달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평등과는 당원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적용과는 별도로 당원 및 당 정보를 북한에 유출한 행위를 해당행위로 판단하여 당원 제명 및 출당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자주파는 오히려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 및 피해사례로 규정하

고 관련 구성원들에 대한 정당 차원의 후원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 및 민주노동당 운영에 대한 당 안팎의 신뢰에 결정적 타격을 가한 사건으로, 2008년 2월 민주노동당의 분당이 현실화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침예한 쟁점이 되었다.

4. 제도와 정치 리더십의 문제

1) 제도의 문제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의 정파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전에 예방할 방법은 없었는가? 제도와 리더십의 문제를 통해 이를 찾아보자. 먼저 제도란 관습이나 도덕, 법률 등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제도의 문제는 제도의 특성과 효과뿐만 아니라 제도를 구현하는 이념의 문제와 그 제도가 작동하는 사회적 맥락을 포함한다. 그리고 좋은 제도란 제도 그 자체가 갖는 많은 장점들을 의미하기보다는, 그 제도가 잘 작동될 수 있는 정치의 하부기반과 사회적 조건을 포함하는 일련의 세트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다놓는다 하더라도 그 하부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그 제도는 원래의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나쁜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최장집 2006).

사실 제도 그 자체로만 보면 민주노동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세계적 수준의 반열에 올라 있었다. 한 예로 독일 사회민주당, 이탈리아 좌파민주당 등 유럽의 진보정당들 중에서도 민주노동당처럼 공직 후보를 당원들이 직접 뽑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였다. 그리고 진성당원제와 소환제 등 몇 가지 제도적 실험도 의도한 대로 제대로 진행만 되었다라면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민주주의와 진보의 수준에 무

언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제도의 문제 이전의 어떤 것 때문이었으며, 그 '어떤 것' 으로 인해 제도의 효과 역시 굴절되고 왜곡되었던 것이다.

결국 민주노동당에서 시행해 온 몇몇 참신한 제도들은 나름의 긍정적 의미와 기대 효과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앞서 살펴본 정파 문제로 인해 오히려 정파 간 갈등구조를 심화시키고 지배정파의 패권을 강화시키는 나쁜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그것은 책임정치의 부재라는 상황을 지속시키고 또 잘못된 행위에 대해 봉합과 은폐를 가능하게 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제도로는 당직-공직 분리제, 집단지도체제로서의 최고위원회, 1인 대표제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정파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파등록제의 도입은 논의만 무성했을 뿐 끝내 시행되지 못했다.

(1) 당직-공직 분리제와 집단지도체제로서의 최고위원회 제도

당직-공직 분리제, 즉 당직-공직 겸직 금지의 원칙은 당발전특별위원회(당발전특위)의 발의와 전국적인 당원토론을 거쳐 2004년 제4기 7차 중앙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민주노동당의 핵심제도였다. 당발전특위는 당직-공직 겸직 금지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이 제도는 진보정치를 의회정치로 협소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당의 정치활동이 국회의 운영 사이클에 간헐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며, 당무의 공동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②둘째, 공직 진출자가 한국적 선거주의 메커니즘의 포로가 되는 것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나 제대로 된 진보정치 활동을 벌이도록 만든다는 차원에서나 지역 수준에서도 선출직 당직과 공직을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 ③이 제도는 권력 분산을 통해 지역과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새로운 지도자 군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장기적인 전략이다. ④당직-공직 분리제는 '거대한 소수' 전략이라는, 대중투쟁과 의회활동의 유기적 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기획에서 비롯된 제도이다.

한편 2003년 11월 민주노동당은 임시당대회를 통해 당헌상 최고집행 기관이면서도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하지 못한 전국집행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최고위원회를 신설했다. 13인으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는 일상 시기 당무를 결정, 집행하고 당론을 결정하는 당의 최고 지도부로 의원단 대표를 제외한 모든 최고위원은 당원 직선으로 선출되었다. 제도 그 자체로만 볼 때, 임기 2년의 대표와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9명의 최고위원을 당원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한 것은 당원소환제, 당원발의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당원직선제 도입에 이어 당내 민주주의를 한 차원 높인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당직과 공직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단지도체제로서 최고위원회의 생명은 민주성과 다양성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에 달려 있었다. 당내의 다양한 정치적 경향성과 진보의 가치가 최고위원회로 수렴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엄중한 사태가 터졌을 때 정치적 책임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그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관건이었다.

결과적으로 민주노동당 3기 지도부(김혜경 대표체제)와 4기 지도부(문성현 대표체제)는 이 두 제도의 긍정성보다는 부정성을 심화시키고 극대화시켰다. 당직-공직 분리제는 정파구도 속에서 선출된 최고위원들의 정파적 이해와 무능으로 인해 그 의도와 합치하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데 실패하였다. 오히려 원내와 원외라는 소통 불능의 이중 지도부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혼란만 가중시켰을 따름이었다. 드러난 것은 정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무기력함과 특히 지배정파에 의한 민주적 책임성의 원리의 포기과 책임정치의 실종이었다.

(2) 1인 다표제(1인 7표제)

한편 2004년 총선 후 민주노동당에서는 당의 최고집행기관인 최고위원회를 구성하는 선거에 1인 7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1인 다표제라는 이상한 제도가 자주파의 밀어붙이기와 일부 좌파들의 동조로 중앙위원회를 통

과하였다. 이 투표제도는 투표자 1인이 선출직 최고위원 정수와 동일한 총 12표(대표-1, 사무총장-1, 정책위의장-1, 일반명부-3, 여성명부-4, 노동부문 할당-찬반투표, 농민부문 할당-찬반투표)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특정한 정치적 경향 또는 유사경향들의 담합을 통한 승자독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였다. 특히 일반명부와 여성명부의 1인 7표제는 그러했다. 기존 제도를 약간 변형하여 '1인 7표제 이내' (일반명부 1인 3표 이내, 여성명부 1인 4표 이내)를 도입하더라도 다수파의 독식가능성의 측면에서 기존 제도와 질적인 차이는 없었다.

물론 원칙과 상식에 맞는 대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양한 경향과 가치의 대표자들이 최고위원에 당선되어 최고위원회가 진보의 다원주의로 구성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여성명부와 일반명부에 각 1표씩 행사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었다. 1인 1표제는 각 후보가 당원들이 지지를 받는 득표수에 따라 당선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표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고 그만큼 다양한 후보들이 최고위원이 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통과된 제도는 1인 1표제가 아니라 1인 7표제였다. 1인 7표제는 승자독식을 조장하는 제도이자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를 강요하는 것을 특성으로 하는 제도이다. 최고위원 경선에서 나타났던 각종 부정적인 측면들, 예컨대 세팅선거나 싸늘이나 극심한 네거티브 등은 1인 7표제가 중앙위원회를 통과하는 그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예고되었던 것이다. 정파 간 공존은 정파 간 지분이 적절하게 반영되는 게임의 법칙이 관철될 때만 가능한 것으로, 그래야 상대방의 승리를 기꺼이 승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1인 7표제의 도입은 바로 이것을 차단시킨 것이었다. 1인 다표제의 부작용과 폐해를 경험한 민주노동당은 2004년 이후 지도부 선거는 물론 대의원 선거에서도 좀 더 완화된 형태의 선출제도를 도입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1인 다표제를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¹⁶⁾

(3) 정파등록제

드러나지 않은 권력으로서 비공식 단위의 결정-책임의 회피를 두 축으로 하는 정파의 문제가 심각해지면 해질수록 정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정파책임제’, ‘민주집중제’, ‘토론과 논쟁 강화’ 등이 거론돼왔다. 이 가운데 하나로 정파의 투명성과 공개성과 책임성 확보의 차원에서 정파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파등록제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견그룹을 당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일정한 권한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파의 대표자와 회원 수, 강령 등을 등록한 정파에 대해 의결기구 할당 및 재정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당의 공식적 매체 등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문제는 당원 가운데 정파 소속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당원이 소수에 불과한 조건에서 정파등록제는 일반 당원들의 반발을 불러옴과 동시에 일부 정파 문제를 전당적 문제로 확산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파등록제보다는 정책과 노선 등 정파활동의 양성화와 공개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물론 이러한 문제 제기가 타당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정파 갈등구도 및 지배 정파가 산출하는 문제점과 해악이 당을 마비시킬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 그리고 당 활동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반면 드러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그에 어울리는 공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는 것이다.

자유롭고 공개적인 활동 및 정책 경쟁 등을 통해서 당원들에게 자신들의 노선과 이념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선거 등에서 책임정치의 강화

16) 2007년 대선을 전후하여 극심한 내분을 겪는 과정에서 최후의 통합을 시도했던 심상정 비대위는 정파 패권주의와 민주주의 왜곡을 막기 위해 1인 1표제를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등으로 정파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에서 정파등록제는 실시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당에 대해 천착하지 못하고 특정 정파의 협소한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 나쁜 정파와,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운동권으로 머무르고 있는 무식한 정파만 있을 뿐, 긍정적이고 건강한 제대로 된 정파는 없는 상태에서(진보정치 149호 2003.9 .29), 정파등록제는 초기에는 대부분의 정파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스스로의 실체를 부정한 지배 정파에 의해 거부됨으로써 결국 시행되지 못했다.

2) 정치 리더십의 문제

정치 리더십이란 기본적으로 정치조직을 통솔하고 변화시켜가면서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충성과 신뢰를 갖도록 하는,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정신, 자세, 덕목, 자질 등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그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전략적 기회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구성원들의 열정과 의지를 응집해내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 과정은 리더와 구성원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동태적이며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좋은 리더십이 존재할 때, 그 조직의 생명력은 강하고 대안적 비전의 창출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의 범위도 확장된다고 할 것이다(조현연 2006).

한편 정당이 정당답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중첩된 몇 가지 조직의 딜레마를 해결해야 하는데, 한 정치학자는 이를 ‘대표의 딜레마’, ‘참여의 딜레마’, ‘권력의 딜레마’, ‘제도화의 딜레마’ 그리고 ‘혁신의 딜레마’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박상훈 2005). 민주노동당의 경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그것은 바로 정파 갈등 구조 및 지배 정파의 패권주의로 인한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진보세력의 경우 기성의 지배이념과 경쟁할 수 있는 대안적 이념과 미래지향적 비전의 필요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현상 유지를 바라는 집단의 경우 현실을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반면, 현실의 변화와 변혁을 지향하는 정치세력의 눈은 불가피하게 미래에 두어지게 된다. 따라서 불확실한 미래를 말하며 대규모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진보세력에게 현재와 미래의 간극인 '혁신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기제로서 이념의 발전과 리더십의 발전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공동체를 제도나 추상적인 규칙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현실이 아니며, 정당 리더십의 발전 속에서 자연스럽게 조직적 권위와 규율의 체계화가 발전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에 맞다고 할 것이다.

사실 민주노동당에 요구된 좋은 정치적 리더십은 투쟁의 목록과 지침을 만들어 하달하거나 단순히 투쟁의 현장에 수시로 깃발과 함께 나타나는 얼굴에 있지 않았다. 또 이른바 '거대한 소수' 전략이 상징하듯이 단지 원내에서 입법 발의를 열심히 수행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 핵심은 상황에 대한 예리한 판단력과 정확한 방향 감각, 전략적 취사선택, 원내와 원외를 아우르는 당력의 결집 및 추출 능력, 당원들과 지지층이 지닌 잠재적 역량의 현재화 및 극대화 능력, 그리고 대중적 설득의 확산을 통한 참여와 지지층의 확장 능력이었다. 이 모든 능력들은 당의 핵심 현안인 정과 갈등의 조정과 통합을 이끌어내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로운 혁신의 비전을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의 문제로 집약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민주노동당의 리더십은 좋은 리더십이라고 할 수 없었다. 사실 퇴행적인 정과 간의 갈등과 지배정파에 의한 패권주의적 파행이 지속적으로 표출되었음에도, 그것을 통제하고 조정함으로써 통합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혁신을 주도할 리더십은 부재했던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리더십은 갈등억제형 리더십(권영길 대표체제)-갈등융합형 리더십(김혜경 대표체제)-갈등증폭형 리더십(문성현 대표체제)으로 변화해왔다. 그리고 성찰과 혁신을 통한 당내 정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성찰적 혁신

리더십'으로서의 심상정 비대위체제는 다수의 이름으로 거부당했다.

민주노동당에 좋은 리더십이 부재한 것은 리더 개인의 자질 문제에 앞서 혁신의 리더십 창출을 불가능하게 만든 당의 구조와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당직-공직 분리에 따른 원내와 원외의 이중권력구조, 당 활동 경험이 거의 전무한 채 정파 활동에만 익숙한 인물들에 의해 장악된 최고 위원회, 의원권력에 대한 과도한 제약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운동적 관념, 인물정치에 대한 과도한 비판의식과 거부감, 특히 주요 활동가들을 당권 경쟁에만 치중케 하는 양대 정파구조와 지배정파의 일방적 패권주의의 구조화 등이 그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비효율적 구조야말로 역설적으로 혁신적 리더십의 형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리더십 문제는 2004년 총선 이후 더욱 심각해졌으며 당 조직 전체를 소통 불능과 동맥경화 상태에 빠뜨렸다. 3기 김혜경 대표체제와 4기 문성현 대표체제는 1기와 2기 권영길 대표체제와는 달리 창당 주역으로서의 권위도 대중적 신뢰도 없었고, 또 집단지도체제와 당직-공직 겸직 금지 원칙의 규정을 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정파 안배 또는 특정 정파의 좁은 정파적 이해에 기초한 일방적 지지에 의해 출범했다는 데서 이미 태생적 한계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¹⁷⁾ 즉 정파 구도에 포획된 채 출범한 대표체제는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정파 문제의 폐해를 해결한다는 것은 특별한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열린 2중대 논란’, ‘당 기관지 사태’, ‘부유세 도입을 위한 조세개혁

17) 김혜경 대표는 평등파의 한 흐름인 이른바 화요모임 계열에서 추대하고 민주노동 국민파가 중재해 자주파 계열에서 이를 수용해 일종의 정파담합의 대표로 선출되었다고 한다. 김혜경 대표체제의 중도 하차 이후 차기 지도부에 대한 논의도 역시 정파구조에서 다시 시작됐다. 당직-공직 겸직 금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주파 계열은 내부 파두그룹인 울산, 인천, 경기 동부연합 중 그 어느 쪽도 대표를 내세울 수 없었으며, 그 결과로 추대된 것이 바로 한때 민주노동 중앙파의 리더였던 문성현 대표였다.

안 과동', '군대 배치를 주장한 독도사태', '한반도 비핵화 당론에 대한 거부', '일심회 사건' 등은 그동안 당을 정치적 혼란 상태로 몰고 갔던 주요 정치적 사건이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바로 당의 지도부인 최고위원회가 있었으며, 이는 곧 당 안팎의 정치적 지도력과 대중적 신뢰의 실추로 이어졌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 것은 이러한 상황이 당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즉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다수의 힘에 근거한 다수의 횡포와 일방적 지배로의 발전일 따름이었다.

5. 맺는 글

한국 진보정당운동은 오랜 역사적 단절 끝에 1980~90년대의 정치적 모색기와 실험기, 1997년의 국민승리21에서 2000년 민주노동당의 창당에 이르는 독자적 자기정립의 시기를 경험하였다. 그것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적 과정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후 2002년 지방선거와 16대 대선을 통해 비로소 보통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또 2004년 17대 총선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조현연 2004b).

그러나 역설적으로 17대 총선의 성공은 민주노동당 위기와 과국의 계기였다. 잠재해 있던 20세기형 정파들 간의 넓은 대결구도와 지배정파의 일방적 패권주의가 표출되면서, 당의 '거대한 소수' 전략,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의제의 정치적 실천 등은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에게 요구된 것은 무엇보다도 시대에 뒤떨어진 정파들, 특히 지배정파의 자기 혁신이었다. 그리고 자기 혁신의 과정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찰적 전망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왜냐하면 혁신 없는 성찰적 전

망은 공허하거나 현실의 문제를 숨기는 것이며, 성찰적 전망 없는 혁신은 현실의 동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성찰과 혁신에 대한 안팎의 요구가 특히 당내 지배 정파인 자주파에 의해 거부당한 상황에서, 그리고 제도와 리더십이라는 두 개의 예방장치가 파국적 상황의 도래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분당이라는 파국적 상황의 도래는 필연적이었다. 종북-패권주의와의 단절과 결별 선언으로 시작된 민주노동당의 갈등의 폭발은 일각에서 주장한 NL 대 PD의 해묵은 갈등의 재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변화된 세상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상실된 대중적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물음 속에서 이루어진, 운동질서의 전면적 재편과 진보 가치 및 이념의 혁신적 재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열망의 표출이기 때문이었다.

한편 후양 린쯔(Linz 2002)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 없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할 방법은 없다.”고 단언한다. 좋은 정당정치가 말로 자본과 시장의 경제적 횡포에 맞서 가난한 보통사람들의 삶을 지켜주는 제도적·실천적 기제라는 것이다. 물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정치와 생활정치, 작은 공동체 운동 등 다양한 종류의 운동정치도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운동의 흐름들이 정당정치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방법으로, 그리하여 정당정치와의 열린 소통이 단절된 채 정당정치를 대체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진행된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기성의 헤게모니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하나의 기제로 기능할 위험성이 상존한다(조현연 2007).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사회의 중심적 갈등과 균열을 책임 있게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보통사람들의 삶의 조건과 질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정당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정파라는 이름의 ‘운동권 동창회’ 집합소였던 민주노동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했다. 오히려 약육강식·적자생존의 정글 법칙이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비판해온 민주노동당 안에서 다수

의 횡포와 승자독식의 원칙 아래 그대로 관철되고 재현되어 왔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할 때, 다른 종류의 대안 정당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 대안정당은 민주노동당의 지난 10년의 실험과 실패의 경험을 반면교사하면서, 진보의 자기 성찰적 진단과 새로운 전망 속에서 건설될 필요가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북한과 민주노총이라는 민주노동당이 내장한 2개의 '성역'은 수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재구성된 노동의 이해와 열정에 기반하여 평화와 생태와 인권의 문제를 적극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새로운 대안정당은 민주노동당과는 달리, 소통과 혁신의 좋은 리더십의 구축 속에서 응답-책임-신뢰라는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를 실천하고, 또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과 씨앗을 자기 안에서 만들어 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색깔의 정당이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그 정당은 참된 자유와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견인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참고 문헌

- 김민웅. 2008. “민노당의 분당, 진보신당의 등장 그리고 진보정치의 미래.” 진보신당 주최 진보정치 10년 평가 토론회 발표문 (10월 19일).
- 김석준. 2008. “인터뷰: 쇄신안 신당과 요구와 비슷한데 왜?” 『레디앙』 (1월 30일)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3인 상임대표. 2008. 「특별호소문 : 일부 반복세력의 분열책동을 분쇄하고 민주노동당을 사수, 강화하자」 (2월 4일).
- 노회찬. 2008. “진보정당은 왜 ‘불량’ 판정을 받았나?” 『레디앙』 (6월 9일).
-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이론과 실천』 각 호.

『민주노동당 해당 당대회 자료집』.

『민주노동당 해당 중앙위원회 자료집』.

민주노동자전국회의. 2003. 『2월 3일 당대회 관련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지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2001. 『2001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 자료집: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9월 22일~23일).

박상훈. 2005. “위기의 한국정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진보정치연구소 심포지엄 자료집.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을 찾아서』 (12월 14일).

박상훈. 2007. “인민, ‘중이 짬돌’로 복수하다.” 『레디앙』 (12월 21일).

새로운 진보정당운동. 2008. 『토론자료집: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의 길을 묻는다』 (1월).

샤츠슈나이더(E. E. Schattschneider). 현재호 · 박수형 옮김. 2008. 『절반의 인민주권』. 후마니타스.

서복경. 2004. “4·15총선에 대한 평가.” 한국정치연구회. 『17대 총선 토론회 자료집』 (4월 17일).

자주와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전국모임. 2008. 「자주와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전국모임 해산에 즈음하여」 (2월 18일).

장석준. 2008. “진보정당운동의 반성과 새로운 출발.” 『진보평론』 36호(여름호).

장훈교. 2009. “1997년 이후 민족해방계열의 진보정당운동사: 전국연합 계열을 중심으로.” 미발표 논문.

조현연. 2000. “진보정당운동의 도전과 가능성-민주노동당의 경험.” 한국정당정치연구소. 『4·13총선』. 문형.

_____. 2004a. “2004년 17대 총선과 민주노동당.”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64호(겨울호).

_____. 2004b. “‘독자적 정치세력화’ 저항담론과 합법 진보정당운동-1980년대 이후 ‘민주연합파’로부터의 분화와 자립을 중심으로.” 조희연 편.

- 『한국의 정치사회적 저항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 _____. 2006. “민주화 세계화 ‘이후’ 대안 정당정치 모형 연구.” 조희연 편. 『민주화 세계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 체제 모형을 찾아서』. 함께읽는책.
- _____. 2007.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제의 변화와 대안적 정당체제의 가능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외. 『6월민주항쟁 20년 기념 학술 대토론회 자료집』 (6월 4일~5일).
- _____. 2008. “새로운 10년, 함께 떠나는 진보신당의 길.” 새로운 진보정당운동. 『토론자료집: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의 길을 묻는다』.
- 진보신당 진보정치 10년 평가위원회. 2009. 『진보정치 10년 평가 보고서: 진보정치 10년의 성찰과 전망』 (2월).
- 최장집. 2006. “한국 민주주의와 제도적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심포지엄 자료집. 『6월 민주항쟁과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 (6월29일).

Linz, Juan J. 2002. “Parties in Contemporary Democracies: Problems and Paradoxes.” Rechar Gunther, Jose Ramon Montero and Juan J. Linz, eds. *Political Parties: Old Concepts and New Challenges*. Oxford University Press.

투고: 2009.4.1 심사: 2009.4.3 확정: 2009.4.24